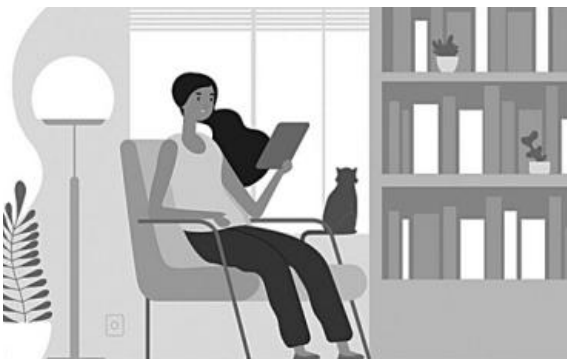


2019년 10가구 중 3가구 '1인가구'



▲ 지난해 한국 10가구 중 3가구는 1인가구였다. 그림=타운뉴스DB

한국 10가구 중 3가구는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를 내며 살고 있고 34%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못했다.

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발표했다.

1인가구는 지난해 기준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1,911만1,000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2%에 달했다. 2015년 27.2%, 2016년 27.9%, 2017년 28.6%, 2018년 29.3% 등으로 매년 커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45.4%로 가장 많

았다. 이어 아파트(31.3%), 연립·다세대(11.1%), 주택 이외의 거처(10.2%), 비거주용(2.0%) 순이었다.

1인가구의 38.8%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9.3%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자가는 30.6%, 전세는 15.8%, 무상 거주는 6.3%였다. 이에 비해 전체 가구의 58.0%는 자가, 15.1%는 전세, 19.7%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했다.

주거 면적은 1인가구의 53.7%가 40㎡(약 12평) 미만이었다.

지난해 1인가구 중 60.8%인 367만1,000가구가 취업자였다. 남자가 208만1,000명으로 여자(158만9,000명)보다 많았다. 취업 1인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는 50~64세가 27.6%, 30대가 22.6%, 40대가 19.5%, 15~29세가 18.7%, 65세 이상이 11.6%였다.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16만원으로 전체 가구(5,828만원)의 36.3% 수준이었다. 1인가구의 소득은 10가구 중 8가구가 3,000만원 미만이었다.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은 4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원 미만 33.9%, 3,000만~5,000만원 미만 14.4%, 5,000만~7,000만원 미만 4.8%, 7,000만~1억원 미만 1.9%, 1억원 이상 0.8%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 3가구 중 2가구는 1인가구였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된다



▲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수원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32년 만의 개정으로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1년 12월이나 2022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시의 지위를 얻을 전망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 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실례로 기초 지방정부 가운데 인구가 123만 명(2020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원시의 경우, 인구 116만 명의 울산광역시보다 7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고,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에 불과하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막오른 인증서 경쟁

21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되면서 21년 동안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제도가 폐지됐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와 경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공인인증서가 범용성과 보안성에서 인정을 받아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비스'도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이미 공인 전자서명 발급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통 3사의 패스(PASS),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발급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6,646만건, 공인 전자서명 발급 건수는 4,676만 건이었다.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업체별로 제휴한 금융 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금융·공공 기관을 선점하는 인증서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쯤 발표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선정이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금융거래와 관련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는 폐지됐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상담 접수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한국 증여/상속 상담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